



タイトル Title	グローバル化と「歴史の再発見」の中の韓日関係 [本文:韓国語]
著者 Author(s)	Kimura, Kan
掲載誌・巻号・ページ Citation	2007年ハンギョレ - 釜山国際シンポジウム,;
刊行日 Issue date	2007-11
資源タイプ Resource Type	Conference Paper / 会議発表論文
版区分 Resource Version	publisher
権利 Rights	
DOI	
JaLCDOI	
URL	http://www.lib.kobe-u.ac.jp/handle_kernel/90000483

Create Date: 2018-08-16

글로벌화와 '역사의 재발견' 안에서 한-일 관계

시작하는 말

1945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이미 62년이 지났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른바 '역사인식'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근대에 있어서 일본의 행동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오늘날 애초의 범위를 넘어서 고대 한-일 관계, 한-중 관계에 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각양각색의 역사논쟁이 전개되는 것일까?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가 '역사문제'가 아니라 '역사인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즉, '과거'와 역사와 역사인식은 각각 별개라는 점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과거'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시간에 따라 현재에서 미래와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과거'에서 사실이 끝없이 존재하고 끝없이 세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과거'가 '과거'인 이상 그것은 일단 확정된 뒤에 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과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의 이야기가 변화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과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변하는 것이다.

즉, '역사'란 예컨대 사회학의 태두인 막스 베버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그런 끝없는 사실의 종합체인 '과거'의 안에서 개인, 혹은 특정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의적, 또는 무의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심에 근거해 특정의 사실만을 추출해 정리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해서 생긴 역사는 원리적으로 '과거'의 사실 그 자체 이상으로 역사를 묘사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역사는 많은 경우 특정의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기본적인 이야기의 과정에 상응하는 사실을 선별해 구성된다. 이런 의미로, 순수하게 학문적인 의미로, 예컨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는 일본시각 1945년 8월 6일이었다'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은 존재해도 '바른 역사'라는 것은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사실에 주목해 묘사한다면 설령, 거기에 서술된 사실의 전체가 정확하다도 해도 사람들은 쉽사리 타자와는 다른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그런 의미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사실에 주목하고, 또 이야기할 것인가라는 점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무한의 경우가 존재하는 '과거'에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의미하고 있다. 그 의미로 '역사인식'과 '역사'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가 전자의 산물이라는 쪽이 그럴듯하다. 물론, 특정의 ‘과거’의 사실의 확정이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끼쳐 그 결과 ‘역사’가 다시 쓰인 적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사물의 확정작업도, 또 사람들에게 의한 일정한 ‘인식’을 전제로 해서 개시된 적조차 없을 터이므로 사실의 확정 자체도 ‘역사인식’은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미 기술한 것처럼 이런 ‘역사인식’은 ‘과거’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설령 어떤 시기에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가 현재는 중요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과거’가 변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변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실 한-일간 주요한 ‘역사인식문제’의 대다수도 이런 성향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다. 한국병합의 ‘합법성’, 이른바 ‘(일본군)위안부’나 전시하 노동력동원의 ‘강제성’ 등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실제 많은 ‘역사인식’ 문제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찌해서 제 2 차 세계대전 종결로부터 60 년 이상 지난 지금도 우리들은 어찌해서 서로 ‘역사인식’에 관한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로 한-일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3 개의 각도에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현황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맨 먼저 애초 우리들이 1945 년 이후 우리들의 ‘과거’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 안에서 필자는 1980 년대 후반 이후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식민지 지배를 체험한 이른바 ‘옛 세대’의 퇴장과 식민지 지배를 알지 못하는 ‘새 세대’의 등장이 오히려 두 나라의 ‘역사인식 문제’를 복잡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두 번째로 동북아시아 각국의 ‘역사인식 문제’의 보다 큰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거론돼 왔다. 즉, 한-일, 중-일을 둘러싼 문제는 식민지 지배나 전쟁을 경험한 ‘옛 세대’의 문제로 조만간 ‘과거’와는 무관계한 ‘새 세대’가 활발하게 상호교류를 전개하면 ‘과거’를 둘러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런 얼핏 ‘미래지향적’임과 동시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옛 세대’가 ‘새 세대’에 문제를 완전히 내맡기는 식의 논의에 근거해 사람들은 이를 위해 노력하고 사태의 개선에 기대를 걸어왔다.

그러나 애초 동북아시아 각국의 ‘교류’는 ‘활성화’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 점에 대해 이제까지 지적돼 온 것과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단행해 동북아시아 각국의 교류는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방향으로 ‘활발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상호의 관계는 집약적인 방향이 아니라 확산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 번째로 이런 역사인식과 사회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정치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잘 알고 있듯이 최근 동북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종래 각국에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지배 엘리트의 위신이 추락해 대규모 체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체제 변혁은 종래와 같은 조직 의존형의 정당정치에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로 대표되듯이 개인적 인기에 의존한 포퓰리즘적 정치로 각국의 정치를 이행시키게 된다. 동시에 이런 기존 정치조직의 위신붕괴는 고이즈미 정권이나 초기의 노무현 정권, 혹은 대만의 천수이볜 정권과 같이 개인적 인기를 보유한 인물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그 인기가 잃어버리게 되면 거꾸로 극단적인 정권의 레임덕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런 정권의 레임덕 화, ‘대중성 없는 포퓰리즘’이 때때로 각국의 정권으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연결시키기 위해 쉽사리 내셔널리즘에 대한 의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이런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 1 장 ‘역사의 망각’과 ‘역사의 재발견’

“ ‘과거’는 무관계한 ‘새 세대’가 활발하게 상호교류를 전개한다면 ‘과거’를 둘러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때 무의식중 전제되는 것은 ‘새 세대’는 ‘과거’의 여러 가지 사실과 무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국적이 달라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리라. 달리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옛 세대’에게는 ‘과거’가 ‘과거’가 아니고 스스로 체험한 ‘현실’인 탓으로 상호 양보하는 것이 곤란한 데 비해 ‘새 세대’에게는 ‘과거’는 어쨌든 자신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건설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들은 실제로 ‘과거’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은 두 나라에서 ‘새로운 역사’의 진출에 의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따라 검토해보기로 하자.

표 1 과 표 2 는 각각 한-일 두 나라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종결 뒤 일관해서 주요 신문의 하나로 입장을 견지해온 <아사히신문>과 <조선일보>가 두 나라의 ‘과거’에 대해 보도해온 기사 수에 관한 데이터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주요 신문 가운데 가장 러버럴(자유주의적)한 신문이며, <조선일보> 또한 어느 시기까지는 반일적 보도로 알려진 신문이다.

이 표에서는 <아사히신문>의 경우 단순히 일본의 ‘과거’와 관련한 기사의 건수를 표시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일본’이라는 단어와 공시에 ‘과거’에 관련한 여러 가지

단어가 포함된 기사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 (단, ‘친일파’와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일본’과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기사 수를 나타내고 있다). 또 <아사히신문>의 경우 기사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상 1984 년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류한 키워드 및 기사항목이 각각의 단어를 포함한 기사 수, 1985 년 이후는 기사 그 자체가 각각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표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은 항간에 이해되는 것처럼, 한-일의 역사인식에 관한 논의는 ‘옛 세대’에서 ‘새 세대’로, 즉 ‘과거’를 직접 경험한 세대로부터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로 변화함에 따라 냉정하게 논의되게 됐다는 통상의 이해와는 다르다. 오히려 ‘옛 세대’가 퇴장하고 ‘새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오히려 ‘과거’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에서는 1980 년대 이후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1990 년 이후 그런 상황이 두드러져 (과거역사 문제의) 해결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차츰 알력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쪽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런 ‘새 세대’의 진출에 따라 역사인식의 활성화는 특별히 한-일간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일본에서 도쿄전범재판, 한국에서 친일파문제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대외문제 뿐만 아니라 자국 안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그 논의가 오늘날 열기를 더하면서 인터넷에서, 혹은 다른 미디어에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과격한 논쟁이 눈에 띄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무수하게 많다.

그럼, 일찍이 새 대는 ‘과거’에 대해 보다 냉정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왜 빗나가버린 것일까? 물론 이런 상황에 대해 예컨대 1987 년 이전의 한국의 언론 상황이나, 이른바 교과서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의 ‘우경화’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에서는 1980 년대 이전과 이후 언론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또한 교과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의 실태가 분명하게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예컨대 표 3~표 5 는 일본의 대표적 교과서발행회사인 도쿄서적, 짓쿄출판, 오사카출판의 고교, 또는 중학교용의 일본사교과서의 일본식민지시기에 관한 기술의 변천이다. 이 표를 보면 이들 교과서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지배에 관한 기술은 확실히 늘어났고, 상세하게 서술됐다. 한-일 두 나라의 역사인식 논쟁 중에서 얘기됐던 것과 상황이 분명히 다르며, 따라서 두 나라에서 일부의 움직임이 과대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 ‘과거’에 대한 집합적 인식의 변화 이상으로 ‘현재’에 대한 집합적 인식의 변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세대교체에 따른 ‘역사의 재발견’의 현상이라는 점이다. 전형적인 문제로서는 예컨대 ‘(일본군)위안부’의 예를 들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이 문제는 1990 년대에 들어서 급속하게 각광을 받게 돼 오늘날까지 이른바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상징적인 성격을 차지하는 데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도 거의 각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애초는 물론 오늘날에서도 한국에서는 때때로 ‘위안부’ ‘정신대’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하는 문제가 혼란상태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것은 적어도 이 시점의 한국의 ‘새 세대’에게 있어 역사적 사실은 완전히 불명료한 것이 됐으며, 그들이 그것을 하나부터 재발견하지 않으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것은 한국의 ‘옛 세대’가 ‘위안부’ ‘정신대’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대의 대통령이나 요인들 대다수는 일본통치기에 군대경험을 갖고 있거나 한반도에서 조선총독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한 모습을 현지에서 보고 들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인 외교적 요구로 삼지 않았고, 언론매체 역시 그것을 거의 완전히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옛 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 알면서도 논의하는 것을 피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1945 년 충칭에서 귀국한 직후의 신익희가 장덕수에게 ‘국내에 있던 자는 모두 친일파’라고 거침없이 얘기했다는 일화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 식민지배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당시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상 불가능한 영향을 전해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 통치하의 사회에서 조선총독부와 관계를 일체 갖지 않고 지내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곤란한 것인가를 우리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옛 세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도쿄(전범)재판’에 대한 논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쇼와(히로히토 일본왕의 연호)전기를 거의 옥중에서 보낸 극소수의 인사는 별도로 친다면, 일본인의 대다수는 만주사변에서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으로 계속되는 일련의 전쟁에 큰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익희식으로 얘기하면 ‘옥중에 없었던 자는 모두 전쟁협력자’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일본의 ‘옛 세대’는 도쿄재판, 그리고 전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른바 ‘A 급 전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A 급 전범’과 일반 사람의 사이에는 ‘BC 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당시 일본인은 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에 의해 전범이 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일본의 국회는 옥중에 있는 전범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를 3 번이나 가결해 그중 2 번은 사회당, 공산당도 포함한 거당일치로 형식이었다. 이 점에 있어 일본이나 한국의 사정은 나치당원 여부를 ‘전쟁책임자’의 하나의 유력한 기준으로 이용해온 독일의 사례보다는 오히려 독일군 지배와 비시 정권 아래 대독협력자의 처벌이 불충분했던 프랑스의 경우에 유사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옛 세대’에 의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를 문제에 대한 침묵’은 결과적으로 ‘세 세대’가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사실에 대해 ‘역사의 재발견’에 착수한 때의 경악을 커다란 것으로 만들었다. 물론 ‘옛 세대’가 ‘과거’에 대해 상세하게 말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책임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일본식민시기, 일본의 교과서로 배우기를 강요받은 한반도의 ‘옛 세대’에게 일본의 교과서에 한반도 지배에 대한 사죄의 말이 쓰여져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 쓰여진 ‘민족사관’을 그대로 믿어온 ‘세 세대’에게 일본의 교과서에게 자신들이 배운 교과서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쓰여져 있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따르면 한국인 전체가 민족을 위해 싸웠어야 마땅한 시기에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등 명문대학 캠퍼스에 서 있는 동상의 인물이 실은 ‘친일경력’이 있었다는 것 등은 용서할 수도 없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이에 따라 스스로가 배운 ‘역사’에는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메우기 위해 ‘역사의 재발견’에 애를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일본에도 일어나게 된다. 1980 년대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페이지가 한반도에서 식민지 지배에 할애되게 됐다. 이런 교과를 받고 성장해온 ‘새 세대’에게 있어 예컨대 한-일 두 나라의 경제사학계에서 ‘1 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났다는 의미에서의 경제성장이 식민시기 한반도에 존재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충격에 버금간다. 그 충격이 그들로 하여금 일본은 한반도에서 ‘좋은 일도 했다’라는 단락적인 논의로 직결시켜, ‘혐한론’을 만들어내는 토양의 하나로 된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옛 세대’에서 ‘새 세대’으로 전환이 ‘옛 세대’가 스스로 관여한 역사의 청산을 피하거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승되지 못함으로써 ‘새 세대’로 하여금 ‘옛 세대’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당연한 역사적 사실, 더욱이 일부에 한정된 역사적 사실의 ‘재발견’으로 초대해왔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역사의 재발견’은 단편적인 센세이셔널한 방향으로 이끌려 두 나라의 역사인식의 사이에 더욱 틈을 만들어내게 된다.

본래라면 역사의 현실을 알고 있을 터인 ‘옛 세대’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세 세대’의 역사관의 안에서 공격을 받고 그 상세한 내용을 말하지 못한 채 우리들의 앞에서 사라지려고 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의 현실을 알지 못한 이런 ‘새 세대’의 등장에 의해 ‘과거’는 차례로 단순하게 센세이셔널한 것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단순하게 ‘옛 세대’가 ‘새 세대’로 교대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듯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제 2 장 교류의 현상

다음으로 역시 ‘역사는 무관계한 새 세대가 활발하게 상호교류를 전개하면 과거를 둘러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때의 전제가 되고 있는, 한-일간 교류에 대해 보기로 하자. 언론매체 등에서 자주 지적되는 바와 같이, 한-일은 물론, 한-중-일, 동북아시아 3 개국간에 있어 사람, 물건, 돈 등의 이동은 일찍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예컨대 표 1 은 한-일간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1965 년 이후의 무역총액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한-일 교류는 예전에 없을 정도로 활발하고 양자는 이미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전된 오늘날 한-일, 또는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 사이의 관계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들의 사회, 우리들 자신에게 어떤 대상의 중요성은 우리들과 대상사이의 사이의 절대적 교류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포함한 가운데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도표 2, 표 3 을 보면 분명하듯이 한국에게 있어 일본, 그리고 미국의 중요성은 장기적 또는 지속적인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은

일본, 그리고 미국 자신의 경제적 상황보다도 오히려 다음의 조건으로 규정되고 있다. 즉, 이것은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제가 발전되고, 그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해 1990 년대 이후 한국이 냉전아래의 전략적 상황에서 해방된 당연한 결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다.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가 지적되는 한-일 사이이지만, 적어도 물적 인적 교류에서 보는 한 일본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도표 4,5 가 나타내듯이 한국과의 무역이 접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 않고, 일본에서 한국행 여행객수도 한-일 월드컵이나 한류현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 그 것은 결국, 한-일간 사람, 물건, 돈의 교류의

증가가 세계의 다른 여러 국가와의 관계 확대에 의해 상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한-일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각국의 사회나 개개인의 관심은 세계의 많은 지역, 분야에 눈길이 향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각국의 사회나 개개인에 의해 일찍이 중요했던 대상이 차츰 어쩔 수 없이 상대화된다. 즉, 한-일 두 나라에게 일찍이 이웃나라였던 것이 경제면에서도 사회 교류 면에서도 그리고 안전보장 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고 있다. 글로벌화는 두 나라에게 선택지를 늘렸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웃나라의 가치는 전례 없이 감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반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에 우리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도표 6 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한-일 두 나라에게 중국의 존재의 확대와는 반대로 중국에게 한-일 두나라의 중요성은 감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글로벌화가 진척되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1990 년대 후반,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있어 한-일 두 나라의 중요성을 상대화시키게 됐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중국의 교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이웃국가이기 때문이기보다는 도표 7 에서 보여지 듯 오히려 중국 그 자체가 급속한 속도로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크다.

이런 동북아시아의 현실은 보통 이해되는 있듯이 ‘상호 교류가 증가함으로써 상호 이해가 전진된다’라는 측면과 동시에 ‘상호의 중요성이 상대화됨으로써 서로에 대해 존중이 잃어버린다’라는 측면도 보유하고 있다. 사실, 표 6,7,8 에서 보여지 듯 2007 년 <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서는 이미 일본인에게 ‘중요한 국가’로서 한국이 인도에 추월됐다. 같은 조사에서는 중국인에게 있어 일본의 중요성은 10 년 사이에 반으로 줄어들어 드디어 러시아와 나란한 수준이 됐다. 그 의미에서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집약적이기보다는 확산적일지도 모른다. 그 것은 앞장에서도 다른 바와 같이 ‘과거’의 ‘망각’과 ‘역사의 재발견’의 움직임과 결부돼 서로 멀시하는 논조를 만들어낸 소지를 창출하게 된다.

어쨌든 이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이해와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현황은, 예컨대 이 지역에서 하나의 지역공동체 만들기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의 의미는, 예컨대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유럽연합의 출발점을 더듬어 가면 유럽경제공동체(EEU)로부터 시작됐듯이 오늘날로 직접 이어지는 유럽의

지역통합은, 애초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역통합을 진척시킨 데 있어 그들이 1950년대 초반부터 경제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뒤의 경제부흥에 덧붙여 안전보장 면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적국을 어디까지나 외부-즉, 냉전치하의 소련-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결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오늘날처럼 커다란 현상이 되지 않은 당시 이웃나라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매우 중요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적 원만한 협력관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상황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와는 크게 다르다. 일본에게 중국, 한국에게 중국의 중요성이야말로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도를 더하고 있지만 한-일에게 상호의 중요성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 중국에게도 한-일은 일찍이 없을 정도로 점점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서 3개국의 사이에서 원활한 경제협력이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안전보장 면에서도 냉전아래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와는 다르다. 중일 두 나라의 정부나 여론이 전략적, 또는 감정적으로 서로를 잠재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 2005년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일본을 한미 동맹의 ‘가상적’으로 덧붙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여론도 중-일 두 나라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잠재적인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지역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어려움은 예컨대 유럽연합에서 동 유럽국가와 러시아 관계를 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하다.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관계의 구축의 지연은 단순히 ‘과거’에 관한 문제에 의한 것만 아니라 이런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를 둘러싼 논의도 이런 구조적 요인에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

제 3장 정치, 또는 지배 엘리트에 대한 신뢰의 붕괴

동북아시아에서 지역협력 관계를 생각하는 데 가장 주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본래라면 일정의 역할을 다해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 특히 서양식 민주주의국가인 한-일(덧붙여 대만)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리라. 그 근거에 있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회적 엘리트에 대한 불신의 확대이다.

예컨대 표 6.7은 ‘월드 벨류 서베이’에 나타난 한-일 두 나라의 중앙정부와 정당의 신뢰도를 유럽을 제외한 세계 30개국 이상과 비교한 것이다. 한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미 2001년 단계에서도 한-일 두 나라의 정부와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각국에서 정부, 정당에

대한 기대감의 크거나 민주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도표 8,9 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듯 한-일 두 나라에서 중앙정부와 정당, 그리고 의회에 대한 신뢰도의 낮음은 같은 국내에서 다른 주요기관, 예컨대 기업이나 시민단체, 경찰이나 군대의 그것과 비교해서 명백하고 그 것을 단순한 통계적 데이터의 문제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일본이나 한국의 정치적 엘리트의 신뢰는 이렇게 실추하고 말았는가?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것은, 본래 이들 국가들에서 특정의 사회적 상승의 경로를 밟아 올라간 엘리트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그들의 '적절한' '위에서부터' 정치지도에 의해 고도경제성장이 달성돼왔다고 믿어져온 것이다. 즉, 도쿄대학이나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관료가 돼 정치적 엘리트로 나간 길이다. 그들은 각각의 사회에서 높은 존경을 모아왔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서 경제성장의 감속이나 통화위기는 이제까지 각국의 경제구조 뿐만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터인 관료적 정치엘리트의 중대한 위신추락을 가져왔다. 신용의 추락은 대학, 관료제도, 그리고 정치인 전반에 걸쳐 오늘날 그들의 기관은 전체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일찍이 도쿄대학이나 서울대학은 자국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들 대학이나 출신자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다. 중요한 것은 도쿄대학이나 서울대학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가이며, 또 졸업자 개개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진지하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0 년 천수이벤 총통, 2001 년 고이즈미 총리, 그리고 2002 년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각국의 잇따른 '개혁 지향적'이고 동시에 정당조직보다는 개인적 인기에 의존하는 의미에서 포퓰리스트틱한 정치가의 등장은 이런 재래식 엘리트의 조락과 그 결과로서 각국의 정치적 변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지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각국의 각당은 목전의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지지율보다도 높은 개인적 지지율을 보유한 후보자 옹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물론, 그것은 그 자체로 합리적 행위이며, 그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5 년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 정체돼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확실히 재래형 엘리트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포퓰리스트틱한 지도자는 애초는 신신하고 공격적인 언동으로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기존 체제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변혁하고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랜드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2005 년 희귀한 요설로 단순히 ‘우정제도 개혁’을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인 듯이 바꿔치기하는 데 성공한 고이즈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듯 정치적 지도자는 부분적인 개혁을 패치워크(각가지 천조각 잇대어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수예) 작업처럼 조합하는 것밖에 개혁을 실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민은 어느덧 그것을 눈치채 그들은 급속하게 스스로의 존재를 지탱해온 개인적 인기를 잃어버리게 됐다.

물론 그런 데는 이유가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오늘날에 있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유사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자유방임주의로 대외정책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소득수준이 이미 상승한 단계에서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 노선으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에는 어떠한 ‘마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화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모델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고, 신자유주의적 시책은 각국의 내셔널리즘을 부추겨 필연적으로 중앙과 지방,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를 확대시킨다. 이것을 재정 출동이나 저금리 정책에 의해 보완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대한 재정적자의 출현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일 정치는 2 막으로 구성된 유사한 연극을 연출하게 됐다. 최초로 산뜻한 언변으로 옛 엘리트들 맹렬히 공격하는 ‘개혁의 기수’가 출연해 정권을 획득한다. 그러나 ‘개혁의 기수’는 실제로 스스로가 실현해야 할 개혁에 대해 ‘그랜드 디자인’을 보유하지 못한 채 개혁은 차츰 바닥을 기기 시작한다. ‘저항세력’은 ‘개혁의 기수’의 몰락을 노리고 그들은 결국 ‘저항세력’에 실각의 막바지 단계에까지 쫓긴다. 그러나 ‘개혁의 기수’는 국민을 동원해 이 장을 돌파해 승리의 개가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제 1 막은 영웅극으로 막을 내린다.

인터넷이 개입된 제 2 막이 오르자 그곳에는 고뇌하는 ‘개혁의 기수’가 있다. 개혁의 그랜드 디자인은 역시 없으며, 국민은 결국 이에 실망하게 된다. 한-일간 달랐던 점은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 2 막에서도 주역을 맡은 데 비해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제 1 막에서 주역을 그만두었다는 점이다. 젊은 아베 총리를 주역으로 삼은 제 2 막은 ‘젊은 개혁의 기수’의 좌절로 끝나고 주역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에서는 주역은 아직 ‘저항세력’과 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일찍이 그의 친구들은 상당수 이미 그의 적이 됐으며, 주역은 절망적인 전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2003 년계를 정점으로 한 국민적 인기를 자랑하는 ‘개혁 지향’의 지도자에 의해 ‘포폴리티가 있는 포폴리즘’의 단계에서 같은 개혁지향이면서도 누구도 절대적인 국뽕거 인기를 보유할 수 없는 ‘포폴리티 없는 포폴리즘’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잠시 동안 한-일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서는 곧바로 그 기대가 뒤집어 매우 짧은 시기에 레임덕 현상이 진행되는 것이 반복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냉전종결 이후의 오늘날에는 예전의 마르크스주의로 바뀌는 듯한, 현실개혁을 위한 명확한 그랜드디자인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그 폐해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보다 커다란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헌법개정을 행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어쨌든 5 년간의 임기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이상 국민은 대통령의 보다 장기정책에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 '개혁'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일본에서보다도 한국에서 훨씬 큰 것도 중요하다. 당연한 것이지만 큰 기대는 그것이 배반당한 경우 커다란 실망으로 변하게 된다. 조기에 레임덕현상에 빠진 대통령은 그것에 장기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정에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보다 좋은 영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리다.

결어에 대신해

여기까지 현대 동북아시아의 '과거'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주로 한-일간 문제에 주목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 언급해왔다.

첫째는 오늘날의 상황은, '옛 세대'가 '새 세대'로 교대함으로써 '과거'를 둘러싼 논의가 잠잠해지고 있다는 예상은 파탄나고 말았다는 점이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오히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옛 세대'가 스스로 얘기할 수 없었던 것, 또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고 구축한 '넓은 역사관'을 재수정할 양으로 '새 세대'가 '역사의 재발견'을 행함으로써 역사인식 문제가 과열하는 상황이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런 '새 세대'의 논의가 때로는 '과거'의 현실을 알고 있던 '옛 세대'의 그것보다 일면적이며, 또 '과거'의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지향한다는 것보다는 개별의 관점에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한-일 두 나라에서 서로 상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들은 '과거'에 대한 한-일 두 나라의 집단적 인식과 동시에 '상대의 역사관'에 대한 집단적 인식에 대해서도 보다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의 역사인식에 대한 인식'을 일부의 사례를 들어 과도하게 강조하고 근거도 불충한 유추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화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과거'를 망각하고 있다는 현실에 마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류'라는 과점에서 본 경우도 우리들의 전도가 다난하다는 점이었다. 일반의 이해와는 달리 동북 아시아 각국에서 상호 중요성은, 경제적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일 두 나라를 제외하면 글로벌화 안에서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북아시아 각국은 전략적으로도 서로 잠재적인 가상적으로 견제하는 존재가 됐다. 그 중에서 ‘과거’를 둘러싼 문제는 각국의 내셔널리즘을 안이하게 자극하는 존재가 됐다. 한-중 두 나라 사이도 교과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교과서, 교과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는 이런 동북아시아 각국의 중요성, 특히 일본의 중요성 저하가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은 각국에서 ‘포폴리티없는 포폴리즘’ 또는 ‘지배 엘리트 없는 시대’의 도래와 발맞춰 각국의 정치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지를 더 얻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발언에 빠지기 쉽게 만들고 있다. 본래는 외교적으로 리버럴(자유주의적) 성향이었다고 일컬어지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6년 8월 15일 굳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것은 그의 신념이라기보다는 그가 2001년 자유민주당 총재선거에 출마했던 때, 경쟁자로서 출마한 하시모토 류타로가 유족회의 지지를 얻고 있던 것을 견제하기 위해 야스쿠니 참배를 공약했다는 정치적 전략의 결과이다. 또 스스로 퇴임할 때까지 그 공약을 지키고 싶다는 고이즈미 류의 정치적 나르시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정치가 이지스 함의 진수식에서 특이하게 일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언급하거나 대형양륙함에 일부러 ‘독도함’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명칭을 부여한 것처럼 한-일 두 나라의 정치적 지도자는 차츰 두나라간 문제를 ‘조잡’하게 다루게 됐다.

사회에서 서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그 안에서도 ‘과거’가 잊혀지거나 사람들은 자신이 체험하지 않았던 ‘과거’에 대해 ‘조잡’한 ‘역사의 재발견’의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정치인은 부질없는 인기몰이를 위해 두 나라의 미묘한 문제를 매우 ‘조잡’하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의 앞날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확실히 동북아시아 각국의 관계는 글로벌화의 안에서 차츰 상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젠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감속하면 그 경향은 다시 한층 현저하게 되리라.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서로 유럽 각국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장래에 대해 흐름에 빠져 상대를 멸시할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때때로 그 불안정성이 지적되는 동북아시아는 실제로는 1953년 한국전쟁 종결 이후 반세기 이상 전쟁을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다. ‘미래 지향’이라는 말이 때때로 강조되지만 ‘미래’로 이어지는 길은 ‘과거’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다. ‘나쁜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극복해 오늘날 우호관계를 쌓아올릴 때까지의 ‘또 하나의 과거’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때가 와도 좋지 않을까?

